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재추진”

김춘진 도당 위원장 간담회 가져... “국책사업으로 진행 · 전북준장군 동상 건립사업 중앙당 연계”

김춘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지난 8일 김 위원장은 이승우 이사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및 김병성 문화사업국장(KBS전주방송총국)과 도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일시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입으로 위난에 처한 국가를 보위하고자 일어섰던 오늘날 촛불정신과 유사한 정신이며,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전북준 장군 순국 장소인 서울 종로구 영종빌딩 앞에 세워질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북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북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은 국민들의 성금모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앙당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안출마반대’ 공식된 직책 국민의당, 새 인사 임명

국민의당은 최근 황주홍 전당대회준비위원장(전준위원장) 등 안출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사퇴해 공식이 된 당직에 새 인사들을 임명했다.

김영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공식이었던 당직은 전준위원, 비상대책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등 총 5개 자리다.

앞서 각각 전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황주홍 의원과 장정숙 의원이 당직을 사퇴한 바 있다.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하며 당직자의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고 선거위원을 맡았던 김경진 의원도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직을 내려놓았다.

이와 함께 김용필 전준위원, 이번 전당대회에 청년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배준현 선거관리위원(비대위원 겸직)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김관영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준위원장을 겸직하고 전준위원으로 이진태 기획조정위원장을, 선거위원에 심종기 사무부총장과 이현웅 조직위원장을 새로 선임했다.

또 국민의당은 배준현 비대위원 자리에 이태규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경선 기탁금을 당 대표 7,000만원, 최고위원 3,000만원, 여성위원장 1,000만원, 청년위원장 3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선거인 명부는 지난달 28일 자정 기준 총 24만1,287명의 당원으로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10~11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자격심사를 완료할 것이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하면 기탁금을 반환받는다”며 “당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서 자격심사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 세칙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V토론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고 14일 오전 후보자들이 모여 공명선거하겠다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공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은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째 되는 오는 1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대응전력 확보 시급하다”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 방산비리 말 안 나와야...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국 콧 앤더슨 기지를 불시에 타격하겠다는 북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집금 및 보직 신고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군 사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는 역시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른 하나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역시 국방개혁”이라며 “조금 개선하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닌 아예 환골탈태 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관병 갑질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 장병의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이제는 관행적 문화에 대해서 일신(日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고식에는 전날 단행했던 군 수뇌부 인사 대상자 6명이 참석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군사령관, 김운용 제3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삼정검(三精鍊)에 수치를 달아 직접 수여했다. 삼정검은 육·해·공 3군과 호국·통일·변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뉴스

박범계 “땀글, MB 스스로 입증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정원 땀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MB가 스스로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하는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적폐 청산 TF 활동에 대한 시비가 많다. 시비 전에 적폐 청산에 관해 가담한 인물들은 애간장이 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 조작 관련한 활동은 3년 넘게 지속됐고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극대화됐다”며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측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은 지원부서가 아닌 3차장 실이라는 정보 수집 공작부서에서 관여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특별 활동비가 지급됐다”며 “심지어 군 사이버 사령부에도 특별 활동비가 지급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 당시 심리전 단장인 이태희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며 “(국정원은) 2011년 12월 SNS 장악 보고서를 한 달간 준비·작성해서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에 보고했다”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정도 기간과 규모 조치가 출동했다고 하면 MB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임기 대부분을 여론 조작에 몰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때 MB 국정원이 했던 일이다.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소위 땀글 조작팀과 별도 팀에 MB가 관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김태년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면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주거안정, 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들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8·2 효과에 대해 ‘시장이 정책목표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억제는 기초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향’이라며 ‘임대사업자 전환·처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급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는 질문에는 “공급 대책까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투기억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주택공급을 했을 때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사고 자가보급률이 늘어나게 된다”며 “(공급 관련) 세부내역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 신규 공공주택 개발지구, 신혼부부 희망타운 5만호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 대출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현재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부분이 완화됐다”며 “금융당국에서 그런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